

지방종합



한탄강댐 논란 합의 주민 반응

한탄강댐 건설여부의 결정권이 4명으로 구성된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로 넘어가 9월말까지 결판을 내기로 최종 합의(분보 27일자 3면, 28일 1면보도)하자 한탄강댐 문제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지 여부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한탄강댐 문제는 댐건설 찬·반측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다 참여정부가 연초 사회갈등 해결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국내 24개 사회갈등현안 가운데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의 첫 과제로 선정, 해결될 경우 국내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목적댐 전용댐 주민투표’ 성과

◇지속가능위의 한탄강댐문제조정위 활동

한탄강댐 문제 조정자로 나선 지속가능발전위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위원장: 정진승·이하 갈등조정위)는 지난 5월 말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 댐건설 찬·반측 및 정부, 환경단체 등 4개 관련 당사자 대표들을 구성한후 최근까지 3개월동안 14차례에 걸쳐 당사자회의를 벌였다.

갈등조정위는 그동안 찬·반측의 의견차가 워낙 첨예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으나 지난 26일 오후 흥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2박3일간 일점으로 열린 릴레이 합숙회의 2일차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문 골자

댐건설 찬·반측 등 4개 관련당사자대표들은 정위원장 등 갈등조정위원 4명이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고 최종 결정권을 이들 4인에게 위임한후 1개월이내인 9월말까지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더라도 반대행동을 하지 않는

홍수방지용 건설시 경제성 없어 무산 기대 일각에선 갈등조정위 결정권 성급 지적도 ‘찬·반 모두 사회적 후유증 피할 수 없을 것’

등 모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또 이들 위원들의 대안검증 대상으로 △전변저류와 제방안 △제방안 △분수로와 제방안 △한탄강댐(댐축소)과 전변저류안 △전문가가 제시하는 기타 대안 등 6개안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과 홍수조절효과, 경제성 및 환경성 안정성을 살피기로 했다.

특히 합의문은 한탄강댐 건설 철회시 정부가 수몰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수렴, 지원하는 한편 한탄강댐의 홍수조절목적을 다목적용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철원군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조정위는 철원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한탄강댐 건설의 영향에 대하여 적극 대책을 강구 할 것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주민들 반응 및 향후 전망

주민들은 지난 4년간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운동을 벌인 것은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철원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강화와 함께 장마기 상류지역 홍수피해,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인체피해 및 농작물 작황감소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최종 합의문 가운데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를 야기할 수 있는 다목적댐 전용시 주민투표를 통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을 성과물로 여기고 있다.

한탄강댐이 순수 홍수방지용댐으로 건설될 경우 연중 홍수가 15일동안만 담수되는 등 경제성이 없어 결국 댐건설안은 배제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탄강댐 건설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점을 들어 댐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갈등조정위에 넘긴 것은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한탄강댐 문제는 댐건설 찬·반측 주민들이 수년째 생업활동에 지장을 받으며 투쟁해온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갈등조정위가 검증하고 있는 대안중 어느 안이 선택되더라도 사회적 후유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탄강댐반대군대책위관계자는 “한탄강댐 반대문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갈등 사안이 아니라 정부가 무책임하게 졸속으로 강행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인 만큼 갈등조정위 소속 학자들의 양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鐵原= 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